

EU·멕시코 30%, 캐나다 35%...동맹 흔들는 美 관세

20여 개국에 서한...벼랑끝 전술 구사
구리·의약품·반도체 등 품목도 확대
피해 최소화·트럼프 면 세우기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들에 고율의 관세서한을 잇달아 발송하는 한편으로 구리·의약품·반도체 등 품목별로 관세전쟁을 확산하면서 세계의 무역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실무 당국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율과 부과시기, 품목 등을 놓고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치열한 막판협상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각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기습 관세서한에 당황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가장 최근에 관세서한을 수신한 교역 파트너는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인 유럽연합(EU)과 멕시코다.

트럼프는 지난 11일(현지시간) EU와 멕시코에 나란히 30%의 상호관세를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

다. 지난 4월 상호관세율을 처음 발표할 때 EU는 20%를 적용하기로 했지만, 이날 서한에서는 10%포인트 더 올라갔다. 멕시코도 상호관세율이 기존 25%에서 5%포인트 가 더 올랐다.

국경을 맞댄 캐나다에는 지난 10일 35%의 관세율이 통보됐다. 당초 25%로 설정했던 캐나다의 상호관세율을 내리기는 커녕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히려 10%포인트나 더 올려버렸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당초 이달 21일까지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 라면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굴욕에 가까운 성의'를 보여왔지만, 뒤통수를 맞았다. 특히 캐나다는 미국 테크기업을 상대로 한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하는 양보까지 했지만 소용없었다.

브라질은 정치적 이유로 50%의 보복성 관세를 얻어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브라질에 보낸 관세서한에서 자유로운 선거와 미국인

들의 근본적인 표현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율 50%를 통보했다. 지난 4월 발표한 10%의 기본관세율에서 무려 40%포인트가 올랐다.

트럼프는 특히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마녀사냥'으로 규정하고 "즉시 끝나야 한다"며 내정간섭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강경 보수성향의 보우소나루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정치인으로 재임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가깝게 지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발송한 관세서한을 받은 나라는 20여 개국에 이르는데, 이는 상대가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한 뒤 시한을 두고 몰아붙이는 트럼프 특유의 협상전술을 잘 보여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계속 흔드는 상황에서 상대국들은 힘겨운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받은 관세서한은 최종통고가 아니라 관세유예 마감 직전까지 협상에 더 진

력하라는 일종의 '채찍'에 가깝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채드 바운 선임연구위원은 AP통신에 "전에 (미국의) 시장접근이 허용되지 않은 것에는 이유가 있다.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내 정치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몇 주 만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국들을 상대로 실제로 얻어낼 결과물보다는, 자신이 상대국들을 밀어붙여 승리하는 듯한 모습을 대중에게 보여주는 데 관심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윌리엄 라인시 연구위원은 "그에게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 공개적이고 가시적인 승리의 외양이 중요하다. 무엇을 얻어내는지는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상대하는 나라들에는 "최소한의 피해만 입으면서 어떻게 트럼프를 이기게 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포격을 받은 가자시에서 팔레스타인 관계자들이 희생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가자지구 40% 통제"...휴전 또 교착

구호품 배급 현장서 총격 30여 명 사망
하마스, 철군 범위 확대·종전 보장 요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1년9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쟁을 멈추기 위한 휴전 협상이 이스라엘군의 철군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 협상 난항의 원인으로 서로를 지목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의 참상도 되풀이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60일간 휴전'을 위한 양측 간 논의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 내용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철군 범위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남부 라파 등 가자지구의 약

40%에 달하는 지역을 자국 통제하에 두고 나머지 지역에서만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하마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마스는 가자지구의 절반가량을 사실상 점령하고 주민들을 강제 이주하도록 한 이스라엘의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며, 지난 1월 휴전 당시 수준의 철군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 보장과 원조 문제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하마스는 남은 인질들을 석방하기 전 종전 보장을 요구해왔지만, 이스라엘은 모든 인질이 석방되고 하마스가 해체돼야만 전쟁을 멈출 수 있다고 고집해왔다.

이런 가운데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 현장에서의 비극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이날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식량 지원을 받으려던 주민 최소 31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외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日 정부 "선거 전에 방위비 증액 언급 말아달라"

참의원 선거 결과 우려 美에 거듭 요청
미, GDP의 3.5% 요구...일 "2% 이상"

일본 정부가 이달 20일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미국 측에 '선거 전에는 (양자) 회담에서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언급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에 스스로 방위비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통해 미국이 방위비 문제를 거론하지 않도록 신경 써 왔다.

실제로 미국은 지난 3월과 5월에 각각 개최된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방위비 증액 목표와 관련해 구체적 수치를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당국자는 6월 초순에도 이달 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미·일 외교·국방 장관(2+2) 회의를 염두에 두고 미국 정부 당국자에게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방위비 증액은 언급하

지 않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 당국자는 세 번 연속 언급을 자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면서 "방위비에 대해 더 이상 무엇도 말하지 않으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정권 내 입장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이 일본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목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의 2025년도(2025년 4월~2026년 3월) 방위 관련 예산은 GDP 대비 1.8% 수준이며, 일본은 2027년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올릴 계획이다.

이에 일본은 2+2 회의 일정을 미루자고 제안했고, 참의원 선거 이전에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방위비 목표 수준을 제시하는 것을 막았다.

아사히는 "일본이 미국에 절실히 바란 것은 '참의원 선거에 대한 배려'였다"며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둘러싼 미국의 압력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선거에서 정권·여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日·EU,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美 기업 의존도 낮춘다

23일 도쿄 정상회담서 합의 예정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다수의 소형 통신 위성을 활용한 대규모 위성망 구축 협력에 나선다고 니혼게이지아신문(닛케이)이 1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안토니우 코스타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달 23일 도쿄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방침에 합의한다.

양측이 협력하려는 사업은 많은 소형 위성을 쏘아 올린 뒤 이를 일체화해 운영하는 '위성 컨스텔레이션(Satellite constellation)'이다. 이는 대형 인공위성 1기 체제보다 관측 정확도가 높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EU는 290기가 넘는 위성을 활용해 위성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고, 일본도 우주전략 기금을 통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측은 위성망 구축 협력을 통해 스페이스X 등 미국 기업 의존도를 낮추려 한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연합뉴스